

육군의 창설과 발전

朴 宰 用*

1. 머 리 말
2. 건군기(1945~1950)
3. 전쟁 및 전후정비기(1950~1961)
4. 체제정립기(1961~1971)
5. 자주국방 추진기(1972~1980)
6. 자주국방 강화기(1981~1990)
7. 자주국방 발전기(1991~현재)
8. 맺 음 말

1. 머 리 말

육군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창설되어 60년 동안 국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 해방 후의 혼란과 6·25전쟁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후에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근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한편, 굳건한 국가방위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육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그 발전과정의 성격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여 왔다. 육군본부에서는 1998년도에 펴낸 『육군 50년 발전사』에서 ① 창군('48~'50), ② 6·25전쟁과 군의 정비('50~'59), ③ 월남파병과 국방체제의 확립('60~'69), ④ 자주국방 기반조성('70~'79), ⑤ 자주국방 강화('80~'98)로 시대를 구분하여 육군 50년을 정리한 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서 정리된 육군 50년 발전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육군 60년의 시대를 구분해 보고자 한다. ① 건군기('45~'50)는 국방경비대의 창설로부터 6·25전쟁 전까지, ② 전쟁 및 전후정비기('50~'61)를 전시 부대확장과 전후 군사력을 정비하는 때인 5·16군사정변 전까지, ③ 체제정립기('61~'71)를 격변하는 정치적 상황하에서 군의 체제정비를 실시하는 시기로, ④ 자주국방 기반조성기('72~'80)를 1972년 최초로 국방목표를 설정한 때로부터 자주국방의 기반을 조성한 4공화국까지, ⑤ 자주국방 강화기('81~'90)를 818계획에 의한 군구조개편으로부터 합동군제가 실시되기 전까지, ⑥ 국방태세 발전기('91~현재)를 합동군제가 실시된 이래 국방개혁2020을 추진하는 현재까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¹⁾

육군의 창설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발전과정을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육군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는 것과 함께, 앞으로 육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고는 필자의 견해일뿐 육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1) 국방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① 창군기('45~'48), ② 건군기('48~'50), ③ 전쟁 및 정비기('50~'61), ④ 국방체제 정비기('61~'71), ⑤ 자주국방기('72~'89), ⑥ 국방태세 발전기('90~현재)로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연혁, <http://www.mnd.go.kr> 참조).

* 육군군사연구소 역사편찬사

2. 건군기(1945~1950)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35년의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독자적인 힘만으로 얻은 해방이 아니었기에, 한국은 즉각적인 독립을 성취하지 못한 채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미·소 양국의 일방적인 분할 점령을 받게 되었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확신한 연합국 수뇌들은 전후 새로운 세계질서에 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의 문제도 이때부터 논의되었다. 전후처리의 하나로서 1943년 카사블랑카(Casablanca) 회담에서 처음 논의되었던 한국문제는, '카이로(Cairo) 선언' 이후 '알타(Yalta) 회담'과 '포츠담(Posdam) 선언'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독립을 거듭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의 즉각적인 자주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²⁾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감에 따라 파시즘에 대한 반파시즘의 대결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로 바뀜에 따라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관계도 변화되어 갔다.

1945년 8월 9일 대일선전을 포고한 소련은 곧 한반도로 진격하여, 미국이 제의한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이북을 점령하였다. 북한지역에 진주한 소련군은 군정 초기 북한 내의 공산세력은 물론 민족주의 세력까지 포섭하여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추진하였으나, 점차 김일성을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친소 공산정권을 수립하였다.

한편, 1945년 9월 8일에야 인천을 통해 상륙한 미군은 군정을 실시하려

2) 1943년 11월 27일 미국, 영국, 중국이 대일전에서 서로 협력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카이로(Cairo) 선언문'에서 "앞에 기술한 3대국은 한국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되게 할 것"이라고 하여 한국의 독립 구상을 최초로 명시하였다. 하지만 이 선언문에서 한국의 독립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서 이것이 즉각적인 독립이 아님을 시사하였다.

하였으나 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다음해인 1946년 1월 중순경이 되어서야 군정의 제기능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남한 내의 정치세력을 부정하고 과거 일본의 통치기구를 군정의 도구로 삼음으로써 한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중경의 임시정부까지도 한국의 주권행사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중립을 표방함으로써 좌우익이 뒤섞여 각종 정당 및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³⁾

(1) 육군의 창설

1945년 8월 15일 조국광복과 더불어 귀국한 군사경력자들은 지난날의 나라 없는 민족의 쓰라린 체험을 가슴깊이 되새기며 독립국가의 군대 건설에 참여하고자 군사단체들을 조직하여 창군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경력은 광복군, 독립군, 중국군, 일본육사, 학병, 조선특별지원병, 징병, 만주군 등 다양하였으며, 정치적 혼란과 행정의 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저마다 군사단체를 조직하였으나, 구심점을 제시할 만한 뚜렷한 주도세력이 없어 난립과 이합집산을 거듭하였다.⁴⁾ 게다가 1945년 9월 8일에서야 뒤늦게 진주한 미 점령군은 최초 일본 군경당국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⁵⁾를 내보임으로써 민족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뚜렷한 점령정책이 확립되지 않아 국내정치세력의 단결은 커녕 오히려 그 정치적 지도력을 분산시켰다.

한편, 미군정 당국은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⁶⁾을 제정하고 '뱀부계획

3) 육군본부, 『육군 50년 발전사』, 1998, pp. 29-41.

4) 1945년 11월 30여개의 군사단체가 군정청(軍政廳)에 등록되었다. 이중 두각을 나타낸 단체로는 육해공군 동지회, 광복군 국내지대(國內支隊), 조선임시군사위원회, 학병동맹, 국군준비대 등이 있었다.

5) 미군정 당국의 한국민에 대한 최초의 포고문에서, 일본인과 미군에 대한 반란행위를 삼가도록 경고하는 한편 일본의 문무관(文武官)은 연합사령관에 의해 해임되지 않는 한 현재의 직책에 유임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다.

(Bamboo Plan)'에 의거 25,000명 규모의 군사조직을 설치하려는 계획하에 창군운동단체들을 해체시켜 그들의 에너지를 경비대에 흡수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군정은 이들을 미국식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의사소통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영어학교(軍事英語學校)를 설치하였다. 이곳에서 과거 일본·만주·중국 등지에서 귀국한 군사경험이 있는 장정들을 경비대 간부 요원으로 양성하였다. 이들을 기간(基幹)으로 하여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태릉에 660명의 규모로 국방경비대(國防警備隊)를 설치한 것이 해방 후 우리 군의 시초가 되었다.

미군정하에서 불과 1개 대대 병력으로 발족한 경비대는 군정청 국방사령부 내에 있던 고급 부관실을 경비대 총사령부에 편입시키는 동시에 인사과, 정보과, 작전과, 군수조달과, 의무국, 재정국을 신설하는 등 기구를 증편하면서 연대 창설을 위한 본격적인 모병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1946년 11월 16일까지 각 도(道) 단위에 1개 연대씩 9개 연대가 창설되었다. 이어 통위부에서는 지휘통솔상 3개 연대를 1개 여단으로 편성하고, 1947년 12월 1일 서울, 부산, 대전에 각각 여단사령부를 창설하여 지휘기능을 강화하였으며, 1948년 5월까지 15개 연대와 제4, 5여단 등이 추가로 창설됨으로써 군사조직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동년 8월 24일 한·미간에 최초의 군사협정인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의해 제반의 행정권과 더불어 경비대의 통수권이 한국정부로 이양되어 조선경비대 및 해양경비대는 국군으로 통합되었고 1948년 9월 5일에 각각 육군과 해군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이 명칭은 '국군조직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이었다.

그 후 신응균(申應均) 소령에 의해 기초된 '국군조직법'⁷⁾이 1948년 11월

6) 군정법령 제28호로 국방사령부 설치, 군무국(軍務局)의 창설과 육·해군부 설치, 경찰군 사기관의 금지 등의 내용이다.

7) 국군조직법의 골자는 국군을 육군과 해군으로 조직하고 공군은 필요한 때에 육군에 속한 항공병을 독립시켜 조직하도록 되어 있다.

30일 국회를 거쳐 법률 제9호로 공포됨으로써 건군의 근본이 확립되었고, 동년 12월 15일 통위부(統衛部)는 국방부로,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국군조직법'은 육·해군을 포함한 국방기관의 설치·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정한 법으로,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을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정과 대통령이 부여하는 군령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방부에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을 두고 그 밑에 육군본부와 해군본부를 두게 하였으며 육군본부에는 총참모장과 참모부장을 두었다. 육군본부 초대 총참모장과 참모부장에는 이응준(李應俊) 준장과 정일권(丁一權) 대령이 각각 임명되었다.

이때 육군은 정규군과 '호국군(護國軍 : 예비군)'으로 조직되었고, 미군의 체제를 참고하여 병종(兵種)을 보병·포병·기갑·통신·항공·병참·경리·감찰·군의·헌병 등으로 나누는 한편 참모·부관·감찰·법무·병참·경리·군의·병기 등의 부문(部門)을 두어 비로소 조직체제가 정비되었다.

한편,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철수결정에 따라 육군은 자주국방태세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하여 부대창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결과 1949년 1월에는 제7여단을 창설하여 6개 여단 20개 연대로 확장하는 한편 동년 5월 12일에는 국군조직법에 의거하여 각 여단을 사단으로 승격시켰다. 또한 동년 6월 8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가 각각 창설됨으로써 육군은 경비대 발족 이후 만 3년 5개월 만에 8개 사단 22개 연대로 확장되었다.

이때의 보병사단은 본부 및 본부중대, 3개 보병여단, 포병대대, 군악대, 통신중대, 병기정비중대, 의무대, 병참중대, 공병중대로 편성되었고 병력은 편제상 1만여 명이었으나 여단에서 사단으로 승격한 직후여서 실제 병력은 편제에 미치지 못하였다. 장비 역시 주한미군 철수시 인수한 것으로서 소화기와 탄약 이외의 중화기와 특수무기는 보유하지 못하였다. 특히 차량 및 통신장비는 극히 빈약하였으며 약간의 장갑차와 대전차포 및 2.36인치 로켓포를 몇 문 보유하였으나 전력에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다.

경비대에서 육군으로 전환할 당시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필요병력의 확

보였다. 당시 육군은 지원병 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적 강화에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방체제상 정규군만으로는 미흡하여 예비전력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임시로 의용병제인 호국군이 대통령령에 의해 창설되고 곧이어 병역법이 1949년 8월 6일 공포됨으로써 호국군을 해체하고 징병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군 병력은 모두가 지원병 제도하에서 충원된 인원이었기 때문에 병역법에 의한 병력의 충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내외정세를 감안하여 민병 20만 명의 조직을 역설하고, 이에 따라 1949년 11월 초 대한청년단을 주축으로 청년방위대를 창설하였으나 정치적인 구호에 그쳐⁸⁾ 실제 6·25전쟁 상황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국군창설 과정은 미군정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은 애초 미·영·소·중의 4대국에 의한 신탁통치안을 제시하여 한국을 통일된 독립국가로 발족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개최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당사국 서로 간의 입장차이로 결렬되자 남북은 각기 다른 정부수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염두에 두면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 남침을 막기 위한 군사력 확충으로 그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남한정부는 주한미군철수에 반대하였으나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해 철수가 점차 현실화되자 자주국방을 위한 미국의 군사원조 요구로 그 주안을 돌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의 북침을 우려했던 미국은 남한에 중화기를 공급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으며, 대부분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소화기를 이양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이 시기 육군은 외양적으로는 그 체제를 갖추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경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징병제의 불완전성과 예비전력의 미비로 유사시에 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8) 실효성이 거의 없는 일종의 정치적 어용단체에 불과하였다(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p. 195).

(2) 육군의 시련과 숙군

미군정에 의해 국방경비대를 시초로 발족한 육군은 당초 미군정 당국의 “우익·좌익세력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이란 기본방침하에 사상과 신원을 무시한 무분별한 모병으로 각종 군사단체의 대원들과 각양각색의 인물들을 입대시켜 창군 초기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하였다. 또한 군 간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일본군·만주군 출신 장교들은 일본군대식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여 강압적인 통솔방식으로 대원들을 지휘함으로써 군 내부의 불만을 증폭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군 내부의 문제는 급기야 1948년 제주도 4·3사건을 비롯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 대구 6연대사건 등을 가져왔으며, 군은 미처 자체조직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란진압을 위한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진압작전을 수행하여야만 했다. 이러한 군 내부의 분열은 불편부당의 모병으로 인해 좌익세력이 군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며, 민주 반공군대를 지향했던 진군지도자들이 군 내부의 사상적인 대립과 모순을 제거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군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숙군을 단행하게 되었다.

숙군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은 1948년 6월 18일 제주도 주둔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 4·3사건의 주동자 중의 한명인 문상길 중위의 조종하에 같은 부대 소속의 좌익분자들에 의하여 피살되는 사건이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군은 1948년 10월부터 6·25 직전까지 4차에 걸쳐 숙군을 진행하였으며, 체포되어 처벌된 자만도 총 1,300여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숙군 과정에서 남로당 계열이 조작한 중상모략으로 수사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가족이나 친척 중에 좌익계가 있다고 하여 화를 입은 자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 보니 수사를 받지 않은 장교가 거의 없을 정도였고 심지어는 합동수사반 요원 중에서도 연루자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과감한 숙군은 군내 사상통일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며, 6·25전

쟁을 내부반란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

한편, 북한은 남한의 연이은 반란사건으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지자 이를 무장 유격부대 침투의 호기로 판단하고 동해안과 태백산맥을 이용하여 침투시켜, 반란사건 후 산악지대로 도피한 좌익세력과 합세하여 지리산·오대산·태백산 지구에서 후방을 교란하였다. 또한 6·25 남침을 앞둔 1950년도 초부터는 38선상에서 빈번히 무력충돌을 야기했다. 이에 군은 태백산·지리산 및 호남지구에 공비특별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공비소탕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미처 작전을 종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6·25 기습남침을 당하게 되었다.

3. 전쟁 및 전후정비기(1950~1961)

제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파시즘과 반파시즘의 대결이 끝나자, 세계는 다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정세는 미·소에 의해 분할 점령되어 있는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두 체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전통적인 고립주의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또 다른 세계대전의 발발을 회피하려 하였다. 이에 반해 소련은 적극적인 공세를 통하여 공산혁명을 확산시키려 하였는데, 중공의 중국대륙통일은 소련에게 아시아에서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남한의 군사력 건설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남한에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소극적 방어력'만을 제공하려 하였다. 하지만 같은 시기 소련과 중공으로부터 막대한 군사원조를 받은 북한은 남한에 비해 압도적인 전력우위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침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1) 6·25전쟁의 발발

해방 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자신들의 점령정책에 따라 북한을 소비에트화하기 시작하였다. 소련의 비호 아래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선출됨으로써 당, 군, 행정기구를 모두 장악한 김일성은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가속하는 한편 1946년 8월 15일 보안대를 모태로 하여 보안훈련대대부를 창설·확대하여, 1948년 2월 8일 인민군총사령부로 개칭하면서 건군작업을 완료시켰다.

이후 소련군은 1948년 말 북한으로부터 철수하면서 다량의 중화기를 이양하고 북한군 1개 사단마다 150명 정도의 군사고문단을 잔류시켰다. 또한 북한군을 총 22개 사단으로 증편하고, 전차 500여 대를 공급하여 2개의 전차사단을 편성하였고, 한인계 중공군을 다수 입북시켜 북한군의 전투력을 증강시킨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949년 초부터 전시체제에 들어간 북한은 민청훈련소와 조국보위후원회를 설치하여 병력 보충을 위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였다. 1950년에 접어들면서 사단급까지 군사훈련을 완료하였고, 이후로는 남한 지역 공격을 목표로 하는 가상훈련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북한군의 침략징후에 관한 정보를 접하면서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며, 이에 더해 1950년 1월 12일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태평양방어선에서 제외된 이른바 애치슨성명을 발표하여 한국의 안보상황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었다.

육군 또한 전면전에 대비한 종합적인 방어계획이 없었으며, 각 사단별 계획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단별 계획도 계속되는 반란진압과 공비특별로 인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각 부대의 훈련수준은 중대훈련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사단별 계획은 그 활용을 보장할 수 없었다. 결국 북한의 남침이 개시되었을 때의 각 부대는 초보적인 훈련수준에서 전투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미명을 기하여 중포와 소련제 전차를 앞세운 20만의 북한군은 38선 전역에서 일제히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삼시간에 아군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개전 3일 만인 28일 01시 서울에 돌입하였다. 중과부적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한국군은 한강남안(漢江南岸)에서 새로이 군을 수습, 재편성하여 지연작전을 전개하면서 전열 재정비에 주력하였지만, 한강다리를 조기에 폭파시킴으로써 한강 이북에 있는 대부분의 장비 및 보급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지연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6월 27일에는 미군 전방지휘소가 수원에 설치되었고 6월 29일에는 맥아더 장군이 직접 전선을 시찰하였으며, UN군 통합사령부가 정식으로 도쿄에 설치되고, 일본에서 급파되어온 미 제24사단과 금강방어선에서 한·미 합동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적의 주력은 계속 경부선(京釜線)을 따라 공격하여 7월 15일에는 금강방어선을 돌파하고 동월 20일에는 대전이 함락되었으나, 아군은 새로 증파된 미 제25사단 및 제1기병사단과 함께 강력한 낙동강방어선을 형성, 적의 필사적인 과상공격을 저지하였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면서 같은 시기에 낙동강 방어선에서도 일제히 반격을 개시하여 9월 28일에는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10월 1일에는 38선을 돌파하여 계속 북진, 10월 10일에는 원산, 17일에는 함흥, 19일에는 평양에 입성하고, 11월 24일에는 한·만 국경선상에 있는 혜산진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중공군의 개입으로 아군은 다시 전전선에서 철수작전을 개시하여 1951년 1월에 수도 서울을 다시 적에게 내주고 평택-원주-제천-영월-삼척을 연하는 선에서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아군은 계속되는 적의 대규모 춘계공세를 저지한 후 재반격을 개시하여 3월 14일에는 다시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계속 38선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7월 10일 휴전협상이 시작되면서 전선은 개성-철원-금성-고성을 연결하는 선에서 고착되었으며, 전투양상도 제한전투로 국한되었다. 그 후 이 제한전투의 양상은 오직 휴전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고지쟁탈전(수도고지·백마고지·저격능선 등)으로 일관하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

정의 조인으로 동족상잔의 피어린 전쟁은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2) 육군의 증강과 체제 정비

전쟁기간 중 육군은 미국의 군사원조에 힘입어 부대증강에 심혈을 경주할 수 있었다. 전쟁발발 당시 8개 사단에 불과하던 육군은 사단확장계획에 따라 증원되어 휴전조인 당시에는 3개 군단 18개 사단으로 증강하여 총 병력도 55만여 명에 이르렀다.⁹⁾ 1950년 7월 27일 한국군은 5개 사단¹⁰⁾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미 제8군사령관은 한국군을 10개 사단으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극동군사령관에게 앞으로 1개월에 10,500명으로 편성된 사단을 1개씩 5개월 동안 편성할 권한을 요구하였으며, 1950년 9월부터 사단 창설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전쟁 전 소화기만을 보유하고 있던 육군은 전차를 비롯한 중장비를 보유한 군대로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휴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안보에 관련된 일로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일은 한·미방위조약의 체결이었으며, 미국에 의한 한국의 군사지원은 계속되었다. 육군은 휴전과 더불어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하여 5개 군단에 20개 전투사단을 확보하는 한편 1군·2군 및 교육 총본부를 창설하여 작전·군수·교육의 3개 기능으로 나누어 보다 효율적인 지휘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육군의 확장과 정비는 휴전 성립 후 대부분의 유엔참전국이 철수할 경우를 고려하여 북한군의 재침을 방지할 목적으로 미국과 유엔의 정책으로서 이루어진 하나의 조치였다.

육군의 군사교육훈련은 전쟁발발 직후 훈련소와 육군종합학교를 창설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50년 11월부터는 제2국민병 소집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병력자원 확보로 보다 체계적인 모병과 교육을 수행할 수

9) 한국 육군 20개 사단 확장계획이 진행되어, 18개 사단이 편성되었을 때 휴전을 맞았다.

10) 6·25전쟁 전 육군의 규모는 8개 사단이었으나 개전 초기 지연전을 수행하면서 전력을 재정비하여 수도사단과 제1·2사단을 모체로 제1군단을 창설(1950. 7. 5)하고 제6·8사단을 모체로 제2군단을 창설(1950. 7. 15)하였다.

있었다.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조금의 여유가 생긴 육군은 사단 증편에 따른 인력소요 충당을 위해 논산에 제2훈련소를 설치하였으며,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시 폐교되어 육군종합학교 내에 분교로 병설되어 교육을 실시하던 포병·공병·통신·병기·병참·경리·헌병교육대 등을 정식학교로 재창설하였다.

1954년에 체결된 한·미 의정서에 명시된 국군의 규모는 72만 명이였다. 그러나 미국의 삭감제안으로 1959년 63만 명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육군도 2개 사단을 해체하는 한편, 전력의 부족분을 매우기 위하여 포병증편을 비롯하여 군 현대화를 위한 신장비의 도입과 이에 따른 군구조의 정비, 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쟁을 거쳐 휴전에 이르기까지의 혼란 중에 팽창일로에 있었던 병력을 편성 및 인사제도 면에서 재정비하는 계기로 만들었다. 하지만 감군조치는 미국의 대한원조가 줄어든 결과로 인한 것이었으며, 2개 사단의 해체로 예비병력 1/3의 상실을 가져와 방어임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1959년 1월 1일 육군은 육군본부 직제를 참모부장 제도로 바꾸어 참모업무를 사업별로 통합 지휘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동년 10월에는 교육총본부에 예속되었던 각 병과학교 중 전투병과를 제외한 행정 및 기술병과학교, 여군훈련소 등을 육본 직할로 예속시켜 해당 병과장(兵科長)에게 교육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병과실정에 부합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960년 5월에는 교육총본부를 해체하고, 6월 1일 상무대에 2군 예속으로 전투병과 교육사령부를 창설하여 보병·포병·기갑·화학·항공학교를 동사령부에 예속시켰다.

또한 전력증강을 위한 신형장비의 도입 및 교체계획에 따라 신형 2 1/2톤 디젤 차량 4,747대를 도입하여 구형차량과 교체하였고, 또 당시 M-36형 전차를 M-47형 전차로 교체하기 위한 계획과 560여만 달러 상당의 각종 신형 통신장비 도입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화학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106mm 무반동총과 어네스트존 발사기를 1962년까지 도입하기로 하였다.

4. 체제정립기(1961~1971)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극화된 냉전체제는 1962년 10월, 쿠바사태의 해결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미·영·소 간에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모스크바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동서간의 긴장상태가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한 반면, 1966년 프랑스가 미국의 유럽정책에 반하여 NATO를 탈퇴하고 독자적 노선을 선언하는 등 유럽의 성장에 따라 미국의 지배력이 약화되었으며, 중국과 소련이 정치노선과 국경문제로 침체하게 대립하는 등 공산주의의 중주국이었던 소련은 그 입지를 잃어갔다. 이에 더하여 기존의 동·서 진영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제3세계 국가들이 국제사회에 부상하면서 국제질서는 점차 다극화되어갔다.

한편, 미국은 1969년 '닉슨독트린'을 선언함으로써 월남전 수행을 포함하여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일련의 행동에 한계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소련은 동유럽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1970년 '독·소 불가침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럽에서의 동서대결에 대한 긴장을 완화하였다. 또한 중국은 소련과 대립하는 가운데 핑퐁외교 등을 통하여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이념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띄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소련은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한반도의 적화 통일정책을 포기한 아무런 징후가 없었다. 또한 북한은 중·소와 군사적 우호협력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1962년부터 '4대 군사노선'¹¹⁾을 채택하여 군비증강에 주력하는 한편, 1965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김일성은 "북반부의 혁명기지 강화, 남조선 혁명역

11) 북한은 급변하는 아시아의 정세와 남한에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군사혁명 정부가 출현함으로써 위기의식을 느껴 1962년말,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도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군장비의 현대화를 지표로 하는 소위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였다.

량강화, 국제해방 역량강화”라는 ‘3대 혁명론’을 발표하는 등 대남 적화위협을 고조시키는 강경노선을 채택하였다.¹²⁾

(1) 한국형 육군의 체제 마련

4·19 이후 정권을 잡게 된 민주당의 정치적 부패와 무능, 그리고 침체된 경제는 국민대중의 생활고를 심화시켜 서민들의 경제를 악화시켰다. 또한 용공사상의 대두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국가의 기저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군내 정화운동을 벌였던 청년장교들이 주축이 되어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을 일으킴으로써 군부가 정권을 손에 넣게 되었다.

이후 군부는 반공을 국시의 최우선으로 삼아 국방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1961년 10월 우선 국방정비에 착수하여 차관과 차관보를 2인에서 1인으로 축소시키고, 공무원 직렬을 신설하여 문관(현 군무원)으로 충당하던 4급 이하의 직위에도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총무국을 군무국으로, 관리국을 군수국으로, 경리국을 관리국으로 개편하고 국방부 산하의 연합참모본부를 국방부 내의 연합참모국으로 축소 편입시킴으로써 국방부의 기구는 총무과, 군무국, 정훈국, 병무국, 군수국, 관리국과 연합참모국 등 6국 1과체제로 출발하였다. 이 중 연합참모국은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합참모회의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군령과 군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었고, 특히 군사정책 수립시 연합참모국 기능으로는 각 군간의 업무협조 및 조정이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군사목표 달성도 어려웠다. 이에 1963년 5월 합동참모본부직제가 공포됨에 따라 다음달인 6월 1일부로 합동참모본부가 창설되었다.

국방부는 수도방위를 위하여 수도방위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제주도에도 통합경비사령부를 설치하여 경비력을 강화하고 제주도에 배치된 군에 대한 군수지원체제를 일원화하였다. 전투력 강화를 위하여 전투장비를 현대화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양보다 질적인 면에 치중하였다. 또한 병무행정기능의 합리화를 위하여 종래 내무·국방 양 부서에서 관장하던 이원적인 병무행정을 병무청을 신설함으로써 일원화하였다.

또한 군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각종 기술교육과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재건사업과 농촌진흥에 선도적 역군을 양성하였다. 그리고 군·관·민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부대별로 농촌과 자매결연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켜나갔으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댐공사·산업도로 신설·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등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 지원하여 국가예산을 절약하는 한편 민간의 부족한 건설장비를 제공하였다.

한편, 북한은 휴전 후에도 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1962년도에 전 인민의 무장화, 전 지역의 요새화, 전 군의 간부와, 장비의 현대화라는 소위 4대 군사 기본노선을 내걸고 군사력 증강에 온 힘을 기울였다. 또한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후방지역을 교란하고 민중봉기를 유발해 우리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전략을 끊임없이 구사해 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간첩침략 도발은 1960년대 전반기까지는 주로 간첩에 의한 지하공작활동으로 이루어졌으나 1965년도부터 그 양상이 바뀌어 무장공비를 점차 증가시켜 오다가 1968년 1월 21일에 청와대 기습을 목표로 한 북한 특수부대 김신조 일당이 침투함으로써 남한의 정부와 국민을 경악케 하였다.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창설된 것이 바로 향토예비군(郷土豫備軍)이었다. 광활한 후방지역에서 준동하는 무장공비에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후방지역에 있는 제한된 수의 현역 병력만으로는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자기 공장과 직장을 스스로 지키는 대책이 없는 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2월 7일 경전선 개통식에서 250만 재향군인을 무장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역사적인 향토예비군의 창설이 시

12)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 1998, pp. 167-175.

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동년 2월 28일에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고 3월에 들어 육군본부에 설치된 예비군부에서는 향토예비군 창설에 따르는 시행방침을 육군참모총장의 재가를 거쳐 예하부대 및 관계부서에 배부하였으며, 전국 191개 시·군·구에 대대장요원을 파견하여 3월까지 조직편성을 완료하였고 4월 1일 대전공설운동장에서 창설식을 거행함으로써 향토예비군이 탄생하게 되었다. 향토예비군을 주축으로 한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향토방위체제는 지역단위 공동방위체라는 의미를 가지며 지역단위 공동방위체제는 '통합방위법'에 근거를 두고 지역 내의 민·관·군으로 구성된 방위협의회를 통하여 운영되었다. 또한 이 예비군의 창설로 초전 3일 작전에 부합되는 전시동원태세의 유지와 적정수준의 정예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유사시 즉각적인 예비전력의 극대화에 목표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교육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교육총본부 해체 후 전투병과 교육사령부를 창설하여 전투병과 교육과 교리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한편, 기술 및 행정병과학교를 육본에 예속시켜 교육책임을 해당 병과감에게 이양함으로써 교육운영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였다. 1961년부터 초급장교의 보충과 예비전력의 확보를 위해 ROTC 제도를 신설하여 대학 3·4학년 학생에게 적용하였다. 그 후 1968년에 또다시 교육지휘통제를 단일 사령부로 일원화하여 각 학교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직학교를 제2군으로 예속 변경하였으며 종합행정학교를 창설하여 행정병과 교육체제의 일원화를 기하였다. 또 제2·3사관학교를 창설하여 간부양성교육의 단일화 및 내실화를 기하였다. 1969년에는 국가방위력 증대와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의 교련교육과 일반대학생의 군사훈련이 실시되었으며, 1971년부터는 그간 경찰이 관장하던 예비군 훈련을 실전적 훈련의 성과 제고를 위해 육군이 관장하게 되었다.

한편 1965년도에는 현대전 수행에 부합되게 제222방공포병 '나이키' 유도탄 대대를 창설하였고, 1966년도에는 정신전력 강화를 위하여 정훈병과를

창설하였으며, 제333방공포병 '호크' 유도탄 대대를 창설하는 한편, 1967년도에는 '마이크로웨이브' 시설을 개통하여 군 통신의 현대화를 도모하였다. 1969년에는 동해안 경비사령부 및 제1·2유격여단을 창설하여 북한의 침투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육군체제를 강화하였다.

(2) 베트남 참전과 육군의 발전

1961년 이후 전투력의 증강 및 정비에 온 힘을 다하던 우리 군은 1964년 9월, 월남 정세가 극도로 악화되자, 지원군으로서 월남에 의무부대와 태권도 교관단을 파견한 데 이어 1965년 2월에는 공병 및 수송부대를 증파, 그 통상명칭을 '비둘기'부대라 호칭하고, 사이공에는 주월 한국 군사원조단을 설치하였다. 1964년 5월 미국 정부의 한국군 월남파병 지원요청이 있었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주한 미군 2개 사단을 월남에 전환할 수도 있다는 시사를 하였다. 당시 남북의 군사력은 극심한 불균형 상태에 있었고 병력은 물론 장비면에서도 과거 6·25전쟁 발발 당시의 군사력 비율과 비슷할 정도로 북한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이루어진 월남파병은 미국이 주한미군 사단의 월남전으로의 전환투입 철회와 함께 국군 3개 예비사단의 전투사단화·국군 장비 현대화·군사원조 이관의 중단 등을 약속함에 따라 1965년 10월에는 전투사단으로 수도사단(맹호부대)을 파견하고, 1966년 9월에는 제9사단(백마부대)을 증파하였다. 이로써 파월병력이 5만여 명에 이르자 종전의 주월 한국 군사원조단은 주월 한국군사령부로 개편되었다. 한국군의 월남 파병은 창군 이래 최초의 국외원정이었을 뿐 아니라 공산주의 침략에 대한 공동 방어전선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 4,000여 명이 희생되는 값진 대가를 치렀다.

주월 한국군에 대한 군수지원은 제100군수사령부에 의해서 수행되었지만 제100군수사령부가 담당하기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군수지원은 그 지역에

위치한 미군 및 월남군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았다. 특히 1967년 8월에 주월 한국군 장비의 기준이 되는 장비편성표가 그동안 월남 각지에서 실시한 전투에서 얻은 작전경험을 토대로 대폭 수정되면서 이 수정표에 의해서 주월 한국군은 장비를 점차 신형으로 교체 및 보강하는 장비현대화계획을 수립하였다. 장비현대화계획은 총 58개 품목 5,666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주요 장비로는 M-16 소총, 81mm 박격포, 4.2인치 박격포, M-60 기관총, 각종 차량, 무전기, 항공기 및 헬리콥터, M113 APC 등이었다. 주월 한국군은 1971년 초까지 장비현대화계획의 총 87%에 해당하는 장비를 획득하였으며, 그 중 화력장비는 85.6%, 기동장비 90%, 통신장비 88%, 공병장비 100%, 기타장비 99.7%가 현대화되었다.

또한 독자적인 전술교리 발전에 주력하여 국내에 적용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얻게 되었다. 독자적인 교리발전에서 중대전술기지 운용과 침투작전 실시가 돋보였다. 미군지휘관들은 주월사령부가 창안한 중대전술기지 개념을 적용하는데 회의적이었으며 자신들의 작전개념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맹호 기갑연대 예하 중대전술기지에 월맹군 2개 대대가 공격한 것을 격퇴함으로써 중대전술기지 개념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낮에 충분한 휴면을 취하게 하여 평소 정찰로 익혀두었던 목표지역에 침투, 포위망을 구성한 후 여명을 기하여 일제돌격을 개시, 적을 섬멸하는 야간 침투작전이 연이어 성공을 거듭으로써 한국군을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 입장으로 격상시켰다. 주월 한국군은 수많은 매복작전을 통하여 진지도달전에 적을 포착·섬멸시키는 전술을 발전시켜 한국의 철책선 전방의 DMZ 매복작전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독자적인 교리발전은 그동안의 미군교리 일변도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한국형 교리개편이 단행되기에 이르렀으며, 대북한 전술 우위의 전환점이 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된 한국의 군 현대화계획은 월남파병 이후부터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무상원조의 극대화로 이루어졌다. 월남참전을 계기로 미국은 1966년 3.5억 달러의 군사·경제원조를, 1967년에 전

년대비 3배에 해당하는 11.5억 달러의 경제원조와 6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원조를 제공하였다. 또한 월남참전 이전 군사원조 총액 8.15억 달러(1961~1965)에서 월남참전 후 16.81억 달러(1966~1970)로 증가되어, 이를 기초로 방위산업을 육성하여 군 현대화계획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또한 국군의 발전은 군사력 건설 측면에서 2개 사단 증편과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F-4 18대, 대간첩용 군사장비, 신예 구축함 2척, M-16 소총을 포함한 개인화기, 화력, 기동, 통신, 건설장비 지원과 향토예비군 무장을 위한 소총공장 건설 직접지원 등으로 현대화된 군대로 성장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한·미안보 국방부장관회의의 연례개최 합의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면서 한국의 군사발전은 물론 한·미안보 협력체제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5. 자주국방 추진기(1972~1980)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아시아의 미·소양극체제는 중국의 부상으로 다원화 체제로 전환된다. 월남전으로 내부갈등과 한계에 직면한 미국은 중국·소련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는 한편,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분담토록 하여 아시아 주둔 미군을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¹³⁾ 이러한 미국의 아시아 정책 변화는 한국의 안보상황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1971년 3월 미 7사단을 휴전선에서 본국으로 철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해방 후부터 지속되어 오던 미국의 군사무상원조가 점차 감소하여 1975년부터 차관형식으로 바뀔으로써 그동안 대미의존에 치중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자주국방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13)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95, pp. 173-182.

한편, 그동안 대결 구도에 있던 남북관계가 남북적십자회담과 7·4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원회 회담 등 남북대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1974년도에 최초 땅굴이, 1975·78년도에 제2·3땅굴이 계속 발견되어 한국을 경악케 하였고, 수많은 침투도발과 함께 1976년 8월에는 8·18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일으켜 전쟁발발 일보직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¹⁴⁾

(1) 방위산업의 육성과 전력증강

지금까지 미국과의 집단안보체제에 의존했던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군사정책의 후퇴와 닉슨 독트린에 따른 미 7사단의 일방적인 철수,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방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자주국방을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는 시발점이 되었다.¹⁵⁾ 197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국방은 미국에 의존한 이른바 의타적인 국방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1970년대 중반부터는 국방비 전액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자주국방의 시초는 방위산업의 육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모든 무기체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의 국산화는 선결해야만 하는 문제였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설립하여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를 마련하였으며, 1972년 M-16 소총을 양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본화기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해 나갔다. 이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1978년에는 고도의 전자기술이 필요한 중·장거리 유도탄, 다련장 로켓 개

14) 육군본부, 『육군 50년 발전사』, 1998, pp. 419-431.

15) 차영구·황병무,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오름, 2002, p. 83.

발에 성공하였으며, 공용화기를 비롯한 대구경 포와 전차를 양산하는 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한 병력수송용 장갑차량, 차량도하장비 등의 기갑장비의 생산에도 큰 진전을 보였다. 이러한 방위산업의 급격한 신장은 국가의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그동안 현격하게 벌어졌던 북한과의 군사력 격차를 좁히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무기체계의 국산화와 함께 1971년 주한미군 철수에 앞서 1971년도부터 5년간 한국군에게 북한에 대항할 수 있는 수준의 현대장비를 제공하여 미군 1개 사단의 철수에 대한 공백을 메운다는 ‘현대화 5개년계획’에 대해 미국과 합의가 이루어져 각종 현대화 장비가 도입되었다. 또한 방위세¹⁶⁾를 신설하여 ‘전력증강 5개년계획’¹⁷⁾을 추진함으로써 ‘현대화 5개년계획’을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독자적인 계획을 세워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방위산업의 성장은 ‘제1차 전력증강계획(울곡계획)’을 착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1973년 합동참모본부는 군사력 증강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각 군의 계획을 수립하여 전력증강계획을 작성, 1974년 2월 정부의 승인을 얻게 되었다. 이로서 1974년부터 1981년을 목표연도로 한 ‘제1차 전력증강계획(울곡계획)’이 추진되었다. 이 기간 중에 적용한 전략개념은 ‘한·미 연합 억제전략’으로서 한미 군사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주한미군의 전쟁억제력을 제공받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휴전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며, 재래식 국내전쟁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할 수 있는 방위전력을 건설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1980년대 초에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가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지상작전은 한국 육군이 전담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전쟁 발발 이전에 최

16) 방위세는 월남 패망 이후,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자 ‘국방력의 증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목적 아래 1975년 7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한시적인 세금이다.

17) ‘전력증강 5개년계획’은 1976년 1월~1980년 12월까지의 5개년간 총 50억 달러 규모의 신규장비를 도입하여 국산화한다는 계획이다.

소한 40개 사단을 전투에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전략적 소요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1974년도의 전투 투입능력은 23개 사단(1개 해병사단 포함)에 불과하였으며, 6개의 후경사단과 11개의 방위사단을 전투사단 수준으로 무장하여 즉각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했다. 따라서 전방사단의 4각 편제개편과 개인화기의 전면교체, 전차 및 대전차 능력의 증강, 포병부대의 증강, 공중기동력 확보, 대공 화력 증강, 조기경보능력의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었다. 또한 각종 탄약과 물자의 비축, 각종 노후장비의 교체, 전술공사 등을 실시하여 방어체계를 강화하였다.

(2) 전투태세의 강화

국방부는 1971년 3월 주한 미 제7사단의 철수에 따른 서부전선 지역의 방어력 보강과 한·미 제1군단의 임무종결에 대비한 지휘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검토 끝에 월남에서 철수하는 주월 한국군사령부를 모체로 또 하나의 야전군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71년 11월 22일부터 계획수립에 착수하여, 1973년 1월 22일 제3군사령부 창설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973년 6월까지 사령부 직할부대로 제5통신단과 제3수송 근무대를 비롯한 각 병과 및 기능별 지원부대를 창설하여 창설준비위원회로 예속시켰다. 창설준비위원회는 사령부 창설 후 지휘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1973년 6월 4일부터 5일간 창설준비위원회와 모든 직할부대가 참가한 가운데 ① 평상시 임무수행 상황→② 긴장 상황→③ 전쟁 임박 상황→④ FEBA "A" 작전상황→⑤ FEBA "B" 작전상황 등을 점검하는 종합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1973년 7월 1일 경기도 용인에서 창설준비위원회를 모체로 하여 제3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¹⁸⁾ 제3군사령부는 제1·5·6군단을 포함한 49개 부대를 예속받아 중

18)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 1998, pp. 307-308.

·서부 전방방어지역을 인수하였으며, 서해안 및 인천지역의 대침투작전태세를 강화하였다.

1978년 11월 7일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 지휘할 한·미 연합사령부가 정식으로 발족됨으로써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한·미 안보협력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연합사령부의 설치에 장차 주한미군의 철수와 관련하여 작전지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 방위력 증진에 그 목적이 있었다. 6·25전쟁 발발 직후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됨으로써 한국의 통수기구는 작전권이 없는 지휘를 해 왔었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능력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양국은 연합사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느껴 이를 검토해 오던 중, 1977년 제10차 한·미 안보협약회의에서 양국은 연합사 창설에 합의하였다. 제11차 한·미 안보협약회의에서 연합사령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최종합의에 도달한 한·미 양국은 제10차 한·미 안보협약회의에서 합의한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권한 위임사항”과 1978년 군사위원회에서 하달한 ‘전략지시 제1호’¹⁹⁾ 근거에 따라 1978년 11월 7일 용산 미군 영내에서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였다. 한·미 연합사의 창설로 6·25 직후 ‘대전협정’에 따라 그동안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되었던 작전통제권에 한국이 참여·개입하게 됨으로써 점차 자주성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작전권을 완전 인수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게 되었으며, 이제까지 수직관계로 있어 온 한·미 군사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미 지상군 철수에 대비하는 한·미군 협력의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미군이 30여 년간 행사해 온 한국군 작전지휘권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포기함으로써 한·미 안보관계를 안보협력의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19) 이 문서의 내용에는 종래 유엔군사령부가 행사해 오던 한국군 및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 지휘통제권이 한·미 연합사에 정식으로 넘겨지게 된다는 것을 비롯하여 연합사의 임무와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작전의 광범위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정규전 및 비정규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창설된 예비군은 조직편성·교육훈련·동원체제 등 그 기초를 다지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화예비군부대를 별도로 편성하고 전력화부대 위주로 무장과 교육훈련을 강화하면서 지휘체제를 보강하였다. 또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각종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1975년 수도권 고수를 위한 방위계획을 마련하고, 경인지역 방어사령부를 수도권단으로 개편하였으며, 13개 방위여단을 편성하여 수도권 방어임무를 맡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서부 주요 접근로에 40km에 달하는 전략적 방어 방벽을 완성하고, 북한의 후방 대침투작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안경비체제를 강화하였다. 육군은 이러한 방어체제의 강화를 통해 고도의 경계태세를 갖추는 한편, 1976년부터 '팀스피리트' 한·미 연합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6. 자주국방 강화기(1981~1990)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국과 일본의 성장으로 인하여 동북아 지역의 세계 전략적 비중이 점점 커짐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이 지역에서 힘의 우위 확보 경쟁전략을 지속하는 한편, 동시에 평화공존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면모를 보였다. 1980년대 후반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에 의한 개혁 개방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라 냉전체제는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세계 각국은 각기 자국의 이익 추구 중심의 대내외 정책을 펴게 되고, 군비경쟁 위주의 군사 대결보다는 군비 통제 및 군축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안정된 국제환경을 조성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동서 양진영 국가들 간에 상호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증대되어 갔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 정세 또한 미·소

·중·일 4개국이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을 이루어 갔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화해와 협력의 세계정세 속에서도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대남 침략도발을 위한 군사력 증강에 전력을 집중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남북회의의 일방적인 제의 및 중단, 제3국을 통한 간첩의 우회침투, 남한의 반정부 소요와 사회혼란 등을 책동하여 대남 위장평화공세와 적화혁명 여건조성에 온갖 책략을 구사하면서 군사적 공세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유신체제가 붕괴되고, 과도기를 거쳐 출범한 5공화국은 국방정책의 중점을 자주국방의 확립, 방위태세와 예비전력의 강화, 정신전력의 배양, 국방관리의 정착화에 두고 적의 어떠한 무력 도발도 이를 초전에 응징 섬멸할 수 있는 전후방의 방위태세를 견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1) 제2차 전력증강 사업

'제1차 전력증강계획'은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나 1979년 한·미 합동 정보평가 결과 북한의 전력이 크게 증강되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2차 전력증강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제2차 전력증강계획'은 주로 방위 전력 건설에 치중하였던 '제1차 전력증강사업'과 달리 억제전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억제전력이란 적으로 하여금 전쟁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에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의 와해와 더불어 전 국토의 수복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당시 우리 육군은 아직 충분한 기본전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공·수 양면의 신속성 있는 전력확보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초기 방어단계에서 예비대의 충분한 집중능력을 보장하고 반격단계에서 충분한 공세전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본전력으로서의 적정수의 사단전력과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화력이 확보되어야만

했다. 이에 '제2차 전력증강사업'은 사단전력의 질적·양적 증강, 기갑 및 대기갑 전력의 보강, 포병화력의 질적·양적 증강, 공중기동부대의 확보, 조기경보체제 확립, 방공화력의 증강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보병사단, 기계화보병사단, 동원 및 향토사단 등 19개 사단급 부대를 신설하였으며, 후방지역작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후방지역에 군단사령부를 신설하고, 수도경비사령부를 군단급의 수도방위사령부로 증편하는 등 지휘구조를 개선하였다. 또 북한 대침투작전을 위하여 전략부대 특수여단을 창설하기도 하였다. 특히 88한국형 전차 등의 전차와 장갑차를 실전에 배치함으로써 기갑능력과 기동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155mm 자주포 500여 문 등을 양산배치하였으며, 경헬기인 500MD의 생산배치와 중무장 공격헬기 AH-1S를 도입하여 육군항공전력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억제전력을 확보해 나갔다.

(2) 군제 개편과 전략개념의 수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군 통합작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합참수준의 기구를 군사지휘체계의 정점으로 하여 각 군의 작전부대를 통합지휘하는 통합작전지휘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우리 군의 경우 1949년 3군이 병립된 이후 1963년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국군조직법상의 군령기관으로 합동참모본부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가 군령에 대한 보좌기능만을 수행함으로써 통합적인 작전체제가 성립되지 못하였다. 이에 한반도의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주적인 군사전략 및 전술교리의 발전과 독자적 군사통제권을 발휘하기 위한 지휘체계의 구축 및 구조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818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국군의 대혁신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국군 최고 지휘기구인 합동참모본부가 1990년 10월 1일

창설되었으며, 각 군이 독립적으로 행사하던 군령권이 합참에 귀속됨으로써 합참중심의 통합작전지휘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군 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남북관계의 추이에 따른 전략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한·미 연합지휘체제의 보완과 군비통제의 상황적응적 대비책 강구와 미래지향적 군사력 정비·유지계획의 발전 등 자주적 국방태세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세적 억제전략'을 군사전략으로 하여 2000년대 초까지 대북공세 전력을 확보하여 입체기동전 수행능력을 보장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까지 방위전력 확보를 위한 조기경보체제 및 기존전력을 내실화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억제전력을 보완하기 위한 첨단무기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전력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장차전양상과 대응전략 개념을 고려하여 한국형 전차 및 장갑차를 양산하여 배치하는 한편, 지금까지 분산 운용되어 왔던 기존의 헬기운용을 항공사령부를 창설하여 통합하고 공격헬기 및 다목적헬기를 대량으로 확보하여 배치함으로써 지상전력의 열세를 극복하려 하였다. 또한 즉응반격 전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보병사단을 기계화보병사단으로 개편하는 한편 수도권 북방 문산 전곡축선의 중심을 강화하기 위하여 2개의 동원사단을 창설하였으며, 동해안축선의 중심작전체제 유지를 위하여 1개 여단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기동전 수행능력과 생존성 향상을 위해 자주포를 양산해 배치함으로써 포병의 전력을 크게 향상시켰다.²⁰⁾

한편, 1981년 5월에는 육군 교육사령부를 창설하여 한국적 교리 개발과 미래 지향적인 전투발전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한편 지휘체계를 재정비하였다. 그리고 1989년도에는 육군본부를 지세적 요충지인 계룡대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략적 이점을 배가시켰다.

2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 변천사』, 1955, pp. 308-309.

7. 자주국방 발전기(1991~현재)

국제안보환경은 탈냉전 이후 화해와 협력 증진이라는 안정 속에서 대규모 전쟁의 위협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오히려 소규모 국지전이나 테러 등의 위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 이기주의와 실리주의 경향이 심화되면서 국제관계의 유동성은 더욱 커져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지역은 지역 내 경제적인 협력관계와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고는 있으나, 중국·대만 양안문제, 역사문제, 도서 및 영토분쟁 등의 갈등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 최대의 군사력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각국이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역내 국가간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이 표면화되고 있어 지역 내 불안정한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추진으로 남북의 긴장완화가 있는 듯하였으나, 북한은 경제적 실리 획득을 위한 남북한 교류와 회담에는 적극적이거나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여전히 핵개발 의혹, 미사일 개발 등을 통하여 군사적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안보협력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안보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 특히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1) 효율성으로의 전환

그동안 육군은 수차례에 걸쳐 개혁을 시도하며 전력증강을 이루었다. 그

러나 북한의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양적 재래식 구조는 변함없이 유지해오고 있다. 해방 후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해서 체계를 잡아가던 우리 군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자주국방추진에 힘입어 세계 속의 육군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방개혁은 북한의 전력에 대비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미래 안보환경과 미래전 양상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최근 전쟁의 양상은 대규모 병력에 의한 전투를 지양하고, 첨단정밀무기에 의한 장거리 타격 및 화력에 의한 기동이 중시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지휘보다는 예하에 지휘권을 위임하는 분권적인 작전이 보편화되고 정보화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시스템이 전장의 필수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핵가족화와 저출산은 급속도로 진행되어 군운용에 필수적인 인적자원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제사회비용의 증가에 따른 국방비의 상대적 감소는 전력유지비용에 편중됨으로써 전력증강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병력위주의 양적인 군 구조에서 벗어나 질적인 발전에 주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우리 군은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함은 물론, 장차 예상되는 미래 안보환경과 미래전 양상 등 새로운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방기본정책서'를 작성하여 국방정책의 중·장기 발전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2004~2015년을 장기간으로 설정함과 아울러 1999~2003년을 중기기간으로 설정하여 국민의 정부 기간에 국방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였다.²¹⁾ 이렇게 수립된 '국방개혁 5개년계획'에 따라 육군은 그 지휘구조를 단순 간명화함은 물론 기능부대들을 현대전에 부응하는 부대구조로 변환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휘구조 측면에서는 C4I체계²²⁾의 발전을 바탕으로

21) 국방부, 『국방정책(1998~2002)』, 2002, p. 109.

22) 지휘통제·통신·컴퓨터체계와 정보체계를 유기적으로 연동·통합시켜 자동화된 정보 또

로 전방의 2개 야전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이를 하나의 지상작전사령부로 창설하며, 축선별 작전을 담당하는 군단의 기능을 보완하고, 후방지역의 2개 군단사령부를 해체하기로 계획하였다. 또한 후방지역은 2군사령부의 기능을 보완한 후방작전사령부와 향토사단 중심의 작전체제를 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대구조 측면에서는 기동군단을 작전의 융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고, 특전부대는 일률적인 편성에서 벗어나 임무위주의 부대구조로 개편하며, 육군항공사령부는 작전사령부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계획이 작성되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육군은 지휘구조의 개선으로 지상작전사령부 창설과 후방작전사령부의 창설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안보상황 여건상 지휘부대구조 변화로 인한 안보취약점 노출이 우려되고 한·미 연합작전 지휘체계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한 점이 고려되어 보다 장기적인 미래 군구조 연구와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잠정 유보되었다. 그러나 제대별로 분산되어 지상부대의 전술적 지원위주로 운용되던 육군항공사를 전략적·작전적·공세적 운용이 가능한 육군항공작전사령부(1999. 4월)로 개편하고, 강습여단을 예속시킴으로써 육군항공사는 제한된 독립작전과 공세주축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6월에는 단일 형태의 특전사 부대구조를 다양한 위협과 장차 예상되는 비군사적 위협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부대로 개편하였다.²³⁾

국민의 정부에서 수립된 국방개혁 기본방향은 참여정부에 이르러서도 지속되었다. 국방부는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의 핵심과제인 군 구조개편과 국방개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개혁 2020을 제시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육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미래지향적인 방위역량 구축을 위한 첨단정예 정보·과학 육군건설을 목표로, 육군 군 구조개편 기본안을

는 정보체계를 운용하여 지휘관이 임무 달성을 위하여 부대를 계획하고, 지휘 및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23) 국방부, 『국방정책(1998~2002)』, 2002, pp. 109-110.

2005년도에 설계·발표하였다. 그동안 육군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력위주의 부대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인력운용 및 장비유지 소요 등 경상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력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전력증강에 제한요소로 작용하였다.

군구조개편은 '네트워크기반 동시·통합전' 수행이라는 지상전 개념 구현을 위해 무기체계 전력화와 연계된 부대개편으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부대 및 전력구조로 단계화하여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54만여 명의 병력수준을 2002년까지 37만여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력의 감소로 인한 전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인항공정찰기(UAV), 정찰위성 등 조기경보 및 표적획득 능력을 강화하여 실시간 전장관리 및 지휘가 가능한 지휘통제 능력을 확보함과 아울러, 차기전차 및 장갑차, 다련장로켓, 다목적헬기 등 전투효율이 높은 무기와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기동성과 정밀타격능력을 향상시켜 병력위주의 양적인 부대구조를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구조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²⁴⁾

이에 육군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부대구조 개편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육군구조개편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수방사 및 그 예하 향토사단 개편, 8기보사개편 등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구조개편실을 편성하여 관련부서 및 부대의 추진업무를 조정·통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구조개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육군의 군구조개편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2개의 작전사령부, 6개 군단, 20여개의 사단, 4개의 기능사령부로 중간계층이 단축되고 부대수가 축소되는 반면 단위부대의 완전성이 보장됨으로써 전투력이 대폭 증강될 것이다. 특히 군단 및 사단의 경우 감시, 결심, 타격 및 기동이 실시간에 이루어지고 독자적인 전투근무지원의 편성으로 작전영역이 현재보다 2~3배로 넓어

24) 국방개혁위원회, 『국방개혁 2020 이렇게 추진합니다』, 국방부, 2005, p. 12.

지는 등 그 능력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또한 전방 GOP지역에 정보화 및 과학화된 경계시스템을 갖춘 경비전담여단이 편성됨으로써 병력에 의존하는 경계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계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경계부대 후방에 위치한 상비사단은 교육훈련 및 전투준비에 전념함으로써 전반적인 군의 대비태세는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예비전력 또한 실질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상비군의 대체전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운용중인 300여만 명의 예비군을 150만 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신분 및 주특기별로 맞춤형 훈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정예화할 것이다.²⁵⁾

(2) 해외파병과 육군의 위상정립

우리나라는 해방 후 6·25전쟁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하여 국력신장을 이룩했다. 이와 함께 군도 발전하여 우리나라의 안보는 물론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 군의 해외파병의 역사는 1964년 베트남 파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냉전체제하에서 아시아지역에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였으므로 한·미 공동으로 이에 대처하고자 파병을 결정하게 되었다. 베트남 파병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국군의 전투력을 내외에 과시하고 실전 경험을 축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한·미 안보동맹체제 및 국방력 강화는 물론, 정치·경제·외교적으로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국위선양과 국력신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베트남 파병에 이어 1991년에는 쿠웨이트를 무력으로 합병한 이라크에 대한 UN의 제재조치가 단행된 가운데 미국이 국군의 파병을 요청해 왔다. 당시 대한민국은 UN 비회원국이면서도 우방국의 요청과 유엔의 결의를 존

중하여 33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군(多國籍軍)의 일원으로 154명 규모의 의료지원단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파병하였다. 비록 3개월 미만의 짧은 파병 기간이었지만 중동 특유의 지형 및 기상조건에서 현대전을 체험하고 한국과 국군의 위상을 아랍권에 새롭게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의 해외파병은 1991년 9월 우리나라가 UN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즉, UN 회원국으로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파병지역과 기간도 다양해졌다. 비록 단기간에 국한되기는 하였으나 경찰과 민간인들도 파병부대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파병 모델의 선례가 되었다.

탈냉전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지역분쟁이나 국가 간의 갈등이 증대되자 UN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군은 1993년 7월 소말리아에 250명 규모의 건설공병단을 시작으로 이듬해 3월 18일까지 연인원 516명의 병력을 파병하였다. 당시 UN의 평화유지활동과 분쟁해결 및 재건활동 노력이 활발해지면서 한국군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커졌던 것이다.

그리고 1995년 10월부터 약 1년간 연인원 600명의 야전공병단이 앙골라에서,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연인원 3,300여 명에 달하는 상륙수부대가 동티모르에서, 서부사하라에서는 1994년 8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제23진에 걸쳐 파견된 국군 의료지원단이 국제평화군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그밖에 1994년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을 파견한 이래, 그루지야, 라이베리아, 브룬디, 수단, 아프가니스탄 등에도 우리 군의 옴서버를 파견하여 해당지역의 정전감시 및 조사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한편, 대테러전쟁 지원차원에서는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개된 '항구적 자유작전'에 다국적군의 일원으로서 해·공군 파견에 이어 2002년부터는 연인원 2,000여 명에 달하는 의료지원단(동의부대)과 공병부대(다산부대)를 파병하였다. 2003년 3월의 '이라크 자유작전'에는 건설공병지원단(서희부대)과 의료지원단(제마부대)을 파병했다가 이라크의 전후 복구지

25) 육군본부, 『2007 육군정책보고서』, 2007, pp. 37-92.

원을 위해 이를 다시 사단급 부대규모의 합동군으로 편성된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여 2007년 10월 현재까지 연인원 17,669명이 평화재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²⁶⁾ 이러한 해외파병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위선양 및 국익증진을 가져왔다. 베트남의 파병은 한국의 정치·외교·경제·안보·군사 등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쳐 한국의 근대화를 본격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에 사실상 최초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 군사동맹의 차원에서도 그 결속을 굳건히 하여 향후 안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0년대 이후 다국적군 및 평화유지활동을 통하여 인도적 구호활동과 평화재건활동을 펼치며 한국과 한국군의 위상을 아랍권에 각인시키는 한편, 피파병국가의 분쟁종식 후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국익창출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걸프전 참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원유공급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장차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발판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군의 전투력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베트남 파병은 국군의 현대화와 전력증강에 기여했고, 특히 32만 명에 가까운 병력이 전투경험을 쌓음으로써 대북 실전전력의 우위를 견지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다국적군 및 평화유지군 참여는 첨단무기와 군사전략이 구사되는 현대전을 경험함으로써 군 전력향상 제고의 동기를 갖게 하였고,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과의 접촉을 통하여 실무경험을 쌓음으로써 미래의 분쟁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경험을 획득하게 되었다. 또한 해외파병은 전장실상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 이외에 분쟁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외파병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정부차원의 해외파병 업무수행 조직의 구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파병

26) 육군은 2007년 10월 현재 1,700여명이 12개국 12개 지역에서 다국적군 및 평화유지군으로 활동 중에 있다.

부대의 교육이 다수의 기관에 분리됨으로써 하나의 체계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인적자원의 부족과 유경험자에 대한 인력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PKO 전문가 양성이 제한되고, 해외파병부대에게는 국내와 달리 별도의 지원부대가 없어 군수지원에 오류를 겪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해외파병 관련 법령 및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조직 내에 PKO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국가안보전략차원에서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에서는 PKO 상비부대 편성을 통하여 해외파병시 신속하게 이에 대응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군수지원 및 전문가 양성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8. 맺 음 말

해방과 함께 수많은 단체들에 의해서 창군활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곧바로 창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미군정하에서 국방경비대에 흡수·통합되어 창군의 모태가 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국군으로 전환된 국방경비대는 육군과 해군으로 정식 출범하여 국군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국군은 자주적인 국방태세를 미처 갖추기도 전에 북한의 기습에 의한 6·25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육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쟁을 수행하는 한편 부대 증편을 통한 양적인 팽창과 함께 전력증강을 통한 질적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전후에는 확대된 육군조직을 정비하여 현대화된 육군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들어 우리 군은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의 육성과 전력증강을 추진할 수 있었다. 제1·2차 전력증강사업과 818계획의 성과로 인한 자신감은 그동안 북한전력에 대한 방어위주의 체제에서 적극

적 억제전략으로 수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북한의 전력이 아직도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무기체계의 발전 등 질적인 면에서는 앞서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1990년도에 나타난 전쟁양상의 변화는 우리 군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최근 전쟁의 양상은 대규모 병력에 의한 전투를 지양하고, 첨단정밀무기에 의한 장거리 타격 및 화력에 의한 기동이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육군은 병력위주의 증강보다는 정보화·과학화된 부대를 육성하여 미래전에 대비하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육군은 수적 우위에 있는 북한의 상비병력에 대비하여 국가방위의 주축이 되어왔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합동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첨단무기와 정보화의 발전으로 인해 전쟁개념이 바뀌면서 육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117만여 명이 넘는 대규모의 상비군과 이 중 12만여 명에 달하는 특수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군 전력의 70%를 전진 배치하여 유사시 기습공격이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이 휴전선으로부터 40km 이내에 있음을 고려할 때, 육군은 북한군의 초전 기습공격과 비정규전, 단속전속결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이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실시간 전장관리 및 지휘가 가능하고 기동성과 정밀타격능력을 보유함으로써 기동력, 생존성, 정밀도를 향상시켜 보다 유연한 작전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합동작전시 군사력 운용의 중심이 되어 해·공군과 함께 작전을 성공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8. 5. 23, 심사수정일 : 2008. 7. 30, 게재확정일 : 2008. 8. 8)

주제어 : 육군, 육군 창설, 육군 발전, 육군역사, 국방경비대, 공비토벌, 체제정립, 전력증강, 자주국방, 평화유지 활동

<ABSTRACT>

Foundation and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Park, Jea-yong

This article is to retrace the steps that the Republic of Korea Army (ROKA) has taken in the past by examining the process of development from the founding of the ROKA to this day and to explore the direction that the ROKA should take in the future.

Upon the liberation of Korea, the ROKA was started by numerous organizations at that time which vigorously led activities of building the military forces. However, those efforts did not lead to act of the ROK Army immediately. Under the United States Military Administration, the movements were incorporated into *Joseon* Garrison and became the basis to establish the ROKA. With the foundation of Republic of Korea, *Joseon* Garrison (Korea Constabulary), which became transferred to the ROK Armed Forces, was officially launched, involving branches of Army and Navy.

Before the ROKA prepared for the self-reliant defense position, it had to face the Korean War. While executing the Korean War, the ROKA achieved the quantitative expansion and the strengthening of military forces by means of reinforcement. After the war, the ROKA renovated its structure thus began to possess the modernized form.

The ROKA's rapid progress had been started since 1970s. And this implies that economic growth was the foundation for promoting defense

industry and strengthening of military force from 1970s. The confidence that was gained from the success of the 1st and 2nd Military Reinforcement Plan and 818 Plan later resulted in the offensive deterrent strategy against the North Korea which was shifted from the defensive posture. This was due to the conclusion that yet North Korea's military strength was still ahead of the ROK, the ROK had advantages in terms of quality such as development of weapon system.

The change in the phase of warfare, which appeared in 1990, made us feel that our forces were also looking for a turning point. Recently, the new phase of warfare prefers combats conducted by large-scale military force, emphasizing long-range strikes using high technology precision weapons and maneuver by means of massive firepower. Therefore, the ROKA has been trying to prepare for the future warfare by promoting troops with intelligence and technology rather than numerical reinforcement.

So far, the ROKA has been playing the key role in practicing national defense against North Korea's standing force which owns numerical superiority over the ROK's. However, as the importance of joint operation is highlighted and the concept of warfare is being modified by the advanced weapons and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ce, the roles of the ROKA are getting minimized relatively. To follow this common trend,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also tend to reduce the size of the ground force while increasing the military strength of the Navy and the Air Force. However, North Korea still possesses a ground force 1 million strong and 12,000 troops of Special Operation Forces. North Korea has forward deployed 70 percent of its military force against the ROK and maintained its capability and posture of raid. Considering that the metropolitan area is within 40km from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the ROKA is the only force that can react to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s quick raid, unconventional warfare, and blitz tactics. For this reason, the ROKA will have to come up with forces that can quickly respond to the North Korea's provocation

and develop efficient system which prepares for the future warfare simultaneously.

Key Words: The Republic of Korea Army (ROKA), Founding of ROKA, Development of ROKA, The ROKA History, National Defense Constabulary, Mopping Operations against the NK Armed Guerrillas,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The Strengthening of War Potential, Self-reliance of National Defense, Peace Keeping Operations (PKO)